

제8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1. 4. 28.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4월 28일

2. 회의방식 : 온-나라 PC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은 성 수 위 원 장

최 훈 위 원

윤 석 헌 위 원

이 승 헌 위 원

위 성 백 위 원

심 영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1년도 제7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1차 임시 및 제8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 2021년도 제7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1차 임시 및 제8차 금융위원회 안건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既송부한 자료로 보고에 갈음하고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155호 『서민금융진흥원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21.1.29자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정관의 일부 개정을 인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56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지난 '20년 12월에 개정된 보험업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내용

○ (위원) 보험 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러면 갱신은 가능한지?

○ (보고자) 가능함. 기본적으로 기존 보험제도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됨.

○ (위원) 다만 짧게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겠다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모든 것이 똑같이 적용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57호 『보험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보험계리사 및 재물손해사정사 1차시험에 포함되는 공인영어
시험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대체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58호 『에이아이지손해보험(주)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 종료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에이아이지손해보험(주)에 대하여 부과했던 적기시정조치를 종료하는 내용

- (위원) 에이아이지손해보험(주)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2019년 4월에 이루어져서 2020년 6월까지,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까지 이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조치가 빨리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적기시정조치 종료를 지금 하는 것은 예상보다 10개월 정도 더 걸린 것 같음. 10개월이 더 걸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가 궁금함. 두 번째로, 적기시정조치가 에이아이지손해보험(주) 말고 2019년에 엠지손해보험도 있었음. 2019년 6월에 엠지손해보험에 대해서 경영개선명령을 내려서 작년 4월까지 마치도록 했고, 그때 엠지손해보험이 2,000억 원 유상증자를 했다고 함.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이 이행이 됐는지와 점검여부, 그리고 왜 시간이 걸리는지가 궁금함.
- (보고자) 먼저 에이아이지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 종료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님. 작년 6월말 경영실태 평가계수가 2개월 지난 10월13일에 확정되었음. 그 이후에 11월24일까지 검사를 실시했음.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경영 계량평가등급과 비계량평가등급의 최종 등급 확정을 위한 등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3월29일에 확정이 됐음. 그래서 그 이후에 조치종료안을 보고하게 됐음. 그런 경과가 있었습시다만, 앞으

로는 좀 더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음. 두 번째로 엠지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질문하셨음. 이에 대해서는 엠지손해보험의 자본확충이라든지 그때 제출한 경영계획은 대부분 잘 이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20년 결산결과, 대체투자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제표가 안 좋은 상태임. 그래서 저희들이 계량계수와 종합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중임.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59호 『롯데손해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롯데손해보험(주)의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60호 『하나손해보험(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하나손해보험(주)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 (위원) 하나손해보험(주)건이 앞의 롯데손해보험(주)과 비슷한 유형으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인데, 검사의 배경이 되는 공익신고가 전체 손보사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두 회사만 해당되는 것인지?
- (보고자) 공익신고자는 입찰을 통하여 보험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롯데손보와 하나손보가 차종을 다르게 적용하여 보험료를 잘못 계산한 상태에서 입찰하였다는 제보를 우리원에 제출하였고, 동 내용을 바탕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음
- (위원) 그러면 다른 보험회사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두 회사는 장애인 콜택시용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차종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공익신고가 됐는데, 다른 회사도 만약 같은 사례가 있다면 검사를 통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더 추가되지 않게 고쳐놓으라고 회사에 알려주는 방법이 있음.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합당하지만 추가적인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금감원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 (위원) 다른 건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아이디어가 여러 번 제시되었고, 금감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검사를 나가서 지적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 방향성에서는 동일한 위반사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되므로 계속해서 제재내용 공시 등을 통해 보험회사가 잘못하지 않도록 하겠음

○ (위원) 제 취지는 2020년에 발생한 동 건과 관련된 제재 조치는 그대로 진행하되, 2021년 4월 현재도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중단하도록 보험회사를 지도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알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61호 『(주)카카오페이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등을 위반한 (주)카카오페이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62호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감독제도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6.30일)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하는 내용

- (위원) 지정대상을 보면 법에서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업(여수신·금투·보험)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감독실익이 없는 경우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 시행령에서는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를 감독실익이 없는 경우로 보아 지정제외 하도록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일정금액 미만은 어디에서 규정하는 것인지?
- (보고자) 5조 원 미만은 감독규정으로 되어 있음.
- (위원)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을 했고 시행령에서 또 규정에 위임하는 하였는데, 규정에 위임된 사항이 대상범위 설정 등 상당히 중요한 내용임. 대통령령이 아닌 하위규정에 넣어놓고 우리들 마음대로 한다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함. ‘내부거래의 이사회 승인’ 이런 것은 법에서 위임을 하고 시행령에서 명시했는데 어떻게 더 중요한 대상을 또 넘기는 것인지, 법체계상 괜찮은지?
- (보고자) 문제제기는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법제처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사전심사 과정에서 특별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았음. 왜냐하면 법률에서 지정제외토록 할 수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

는데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비주력업종인 경우, 자산총액 일정액 미만인 경우를 해놓은 것이고 구체적인 금액 5조 원에 대해서는 감독규정에 위임한 것이기 때문임. 일반적으로 금융업법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규정으로 많이 규정이 되어 있음. 그래서 사전심사 과정에서 아직까지 문제제기는 없고, 만약 사전심사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사항도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음.

- (위원) 법에서 시행령에서 위임했는데 시행령에서 또 규정에 위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critical)한 대상이 누구나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위임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법률자문관님도 같이 검토해주시기 바람.
- (위원) ‘행정처분 면책’ 관련해서 면책사유를 구체화한다고 해서 5가지를 열거하고 있음. 그중에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금융위에 보고한 경우(내부통제·위험관리 관련 행정처분 면책) 등’ 이 항목이 면책에 계속 남아있는 것인지?
- (보고자) 사실 법률을 제정할 때부터 규개위에서나 법제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의를 했음. 법률 제정할 때도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지주회사의 경우에 지분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개별 업권에 있는 금융회사들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를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 그런데 금융그룹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지분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법에서는 개별 회사의 이사회 의사결정의 선관주의의무라든가 아니면 비밀유지의무 같은 것이 있는데 개별 회사의 이사가 대표금융회사의 의견 같은 것을 무시하면서 내부통제기준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면책규정을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규개위 권고사항이 있어서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금융위에 보고한 경우’가 면책사유에 들어간 것임. 최근에 라임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도 일정 부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융그룹감독법은 대표금융회사의 이사들이 내부통제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자기 능력 밖의 일을 못해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는 의미에서 ‘내부통제기준·위험관리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금융위에 보고한 경우’를 넣은 것임. 최근 법제처 사전심사 과정에서도 우리 의견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법률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의견제시가 있었음. 아마 이 문구에 관해서는 법제처에서 법률적으로 심사를 해서 법제처 의견을 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법제처 의견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저희도 수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음.

- (위원) 금융위에 보고를 하는 경우에 면책이 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금융위에서 잘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것은 납득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된 문구를 말씀을 해주시길 하셨지만 표현된 것만을 보면 어느 것이라도 가능할 수 있고, 여기 보고라고만 하셨기 때문에 금융위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 권한을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은

없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음. 말씀하신 대로 법제처에서 어떤 식으로 문구를 조정할지 금융위에서 의견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면 지금은 이대로 넘어가고 나중에 법제처 의견이 왔을 때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약간 부담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림.

- (보고자) 알겠음. 금감원에 실무적으로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고 금감원의 우려사항도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공동대응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음.
-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람.
- (위원) 우리가 법문을 만들 때나 행정문서를 만들 때 항상 헛갈리는데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고 할 때 금융위원회가 2가지가 있음. 하나는 우리가 지금 회의하는 이 자체를 금융위원회라고 하고, 하나는 대외적으로 행정관청으로서의 금융위원회가 있어서 금융위에 보고한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에 있는 어떤 과에 보고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회의체에 보고한다는 것인지 그것도 애매함. 지금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 (보고자) 지금 금융위 보고는 행정청으로서의 금융위이기 때문에 결국 저희에게 보고를 하면 금감원에서 검토를 하게 됨. 금감원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금감원이 문제가 있다는 사항을 금융위가

독자적으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구정리 과정에서도 금감원에 알려드렸고 금융위에 보고한다는 것은 금감원에 보고한다는 것과 동일한 취지라고 판단됨.

- (위원) 정리가 됐는데 회의체에 보고한다면 매일 보고할 수는 없지만 보고한다면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의견합의 (consensus)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고, 만약 행정청으로서 금융위에 보고한다면 금융위에서 위임을 하면 결국 금감원에 보고하는 형태와 똑같음. 금감원에 보고한다고 볼 수도 있고 금융위에 보고한다고 해도 금감원에 서로 공유하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우려를 생각해서서 법제처 심의과정에서도 금감원과 잘 협의하고 집행하는 금감원의 입장을 생각해서 잘 상의해서 그 문구도 들어가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의 의견을 잘 반영했으면 좋겠음.
- (보고자) 그렇게 하겠음.
- (위원) ‘보고’라는 용어가 조금 불편해서 금융위 팀장님께서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음.
- (보고자) 알겠음.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그 부분도 반영하겠음.
- (위원) 행정편의상 그렇다면 저도 상관없는데 한편으로는 위임해 줬더니 계속 위임해서, 예를 들어 시행령 같으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데 감독규정에서 규정하여 자기들끼리 규정하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법제처와 협의과정에서 문제제기가 되면 그렇게 하고 아니라면 원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63호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감독제도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그룹 모범규준 연장 및 내부통제체계·위험관리체계 등의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

○ (위원) 아까 제162호 안건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음. 그 건
이 4~5월 중 규제·법제 심사 후 6월 중 차관·국무회의 의결
하고, 법 시행일(6.30.)에 맞추어 시행될 것이라고 말씀하셨
는데 모범규준이나 시행령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는 지난번에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시행령이 조금 늦게 나
왔음. 3월25일 시행하는데 한 1주일 전에 나왔더니 준비기
간을 1주일만 주고 시행한다는 불만이 나왔음. 우리 입장에
서는 1년 전부터 입법예고하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
전에 나왔다는 비난을 해서, 이번에도 6월 하순쯤 이 시행
령이 나오면 또 1주일만 주고 시행한다는 말이 나올 것 같
은데 이것을 앞당길 수는 없고 모범규준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사항을 언론과 6개 그룹에 계속 알려서 그런 비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림.

- (보고자) 그렇게 하겠음. 지금 현재도 6개 그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1월부터 6개 그룹의 의견을 계속 반영하고 법제처 과정에서도 의견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 (위원) 그분들이 우리들한테는 괜찮다고 하면서 언론에는 “우리한테 1주일 만에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 객관적으로 나온 사실은 그런 부분 밖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신뢰성이 저하되는 것 같음. 지난번 금융소비자보호법 당시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이 전도 시간이 짧다는 명분을 거론하지 않도록 언론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소통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64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신용협동조합의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6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 규제 개선 등의 내용으로 '20.5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위임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

○ (위원) 교류차단 대상정보 관련하여 '회사가 이해상충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정보로서 그 기준·범위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공시하는 경우 스스로 차단대상 정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회사가 이해상충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정보로서' 라는 것은 회사가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 뒷부분을 보면 '스스로 차단대상 정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즉, 회사가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차단대상정보에서 뺄 수 있다는 뜻인데 이것이 약간 강한 표현이 아닌가, 물론 법에서 큰 테두리를 정하고 있겠지만 그 범위 안에서는 상당히 큰 재량권을 회사들이 가지고 있으므로, 방향 자체는 문제 제기할 생각은 없는데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보고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해야 될 사항을 보면 정보교류를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는 내용뿐만 아니고, 모든 차이니즈월(chinese wall)이 마찬가지로지만 각종 필요에 의해서 정보를 교류할 필요가 있음. 이것을 업계에서는 월크로싱(wall-crossing)이라고 표현하던데 그런 절차들이 다 마련되어 있음. 그래서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여

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교류의 차단방법뿐만 아니고 예외적인 교류를 허용하는 절차도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업계에서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전제로 받으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래서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 보면 정보교류가 꼭 필요한 경우가 발생함. 실제 사례인데, 외화대출을 받는 기업에 대해 선물 헷지(hedge)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 경우, 외국계 은행과 증권사가 같이 들어왔을 때 은행으로부터는 외화대출을 받고 증권사로 부터는 선물 헷지상품을 사야 되는데 대출을 받은 구체적인 정보를 계열사에 넘길 수 없게 되어 있음. 왜냐하면 차이니즈월 때문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월크로싱의 조건, 절차 규정을 이수해야 됨. 준법감시인한테 일일이 서명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명백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매번 준법감시인의 서명을 받을 필요 없이 내부통제기준에 '그러한 경우에는 월크로싱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쓰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규정한 것은 그 사항을 외부에 공시해라, 내부통제기준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월크로싱을 하겠다.' 하는 것을 공시하라는 추가적인 규정을 도입했음.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운영과정에서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함.

- (위원) 명백한 경우라든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경우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데 요즘 시장을 보면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방식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임. 물론 제 걱정이 우려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면, 저희는 늘 이것을 문

제가 안 생기는 수준으로 끌고 가야 되는 부담이 항상 있음. 아무튼 지침 같은 것도 있고 내부통제를 통해서 저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다듬어 주셔서 저희들이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음.

○ (보고자) 그렇게 하겠음.

○ (위원) 차이니즈월과 관련된 제도는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됨. 그런데 내부통제기준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니까 느슨하게 해도 좋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듦. 사실 최근에 LH에서도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려면 내부통제기준을 업권에서 만들 때 감독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듦. 그러니까 당국에서 지침도 제시하고 실제로 그 기준을 만들 때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 (보고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에서 규정하면 규범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모든 기업의 특수성이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한 10년 동안 그렇게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업계 자율적으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서, 외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규제하는 방법을 바꾸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스스로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

는 수준 자체가 낮아질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발생함.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방안을 생각해 보았음. 먼저 내부통제기준 자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시켜 놓았음. 어느 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질적 수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투자자나 감독당국의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통제 지침이라는 것을 마련하는데 이것을 법령에서 빼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만들기는 그렇기 때문에 협회를 중심으로 만들고 있음. 그래서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물론 저희들이 직접 참여는 아니지만 어떤 내용이 제정되고 있는지에 대해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고 협회 실무자한테 협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내부통제 지침 자체가 현행법에 비해 어느 정도의 질적 수준을 갖추는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일부는 당연히 완화가 되었고 한 90~95% 수준 정도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 결국 이 내부통제기준을 스스로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 임직원들이 실제 정보교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로서는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하게 되면 그만큼 감독책임이 면책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실제 제재과정에서 가감하는 요소로 반영되는데 감독규정에 이런 관련 규정을 좀 더 명확히 반영하려고 함.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무조건 낮게 한다고 해서 유리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증권회사 스스로 높은 수준의 준법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위원) 이런 규제 완화 또는 차이나이즈월을 허무는 작업이 앞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장에 착근될 것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문제 제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다만 지침을 만들 때 그 지침을 협회가 본다는 것만 가지고는 솔직히 마음이 놓이지 않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금융협회들은 대체적으로 규제기구라기 보다는 약간의 이익 변호 단체 같은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물론 잘 할 것이라고 믿어 주어야 하겠지만 처음에 이 제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감독당국에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제도를 매끄럽게 착근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보고자) 타당한 지적이신데, 법령에서 규정했던 것을 내부통제기준으로 업계 자율로 이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 단계에서 준수해야 되는 이 내부통제기준 지침을 감독당국에서 제정해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준 취지와 안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 다만,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협회라고 해서, 증권부문에 있어서는 협회는 자율규제부라고 협회 내부에도 차이니즈월이 있음. 산업 지원하는 부서와 자율규제 부서는 업계와도 어느 정도 선을 가지고, IPO할 때도 인수업무규정 같은 것은 협회에서 자율규제로 하지 않는지? 그런 것처럼 믿고 큰진전을 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당국은 뒤에서 실제 운영 정착되어 가는지 모니터링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음.
- (위원) 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음. 제가 그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님. 제정하는 작업에 함께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사전·사후승인의 과정을 돕는다든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없을지?

○ (보고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금감원에도 이 (안)들이 다 가 있음.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협회가 금감원과 금융위에 이렇게 규정해도 되겠느냐는 실질적인 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음. 아마 금감원 실무자들도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떻게 규정되는지에 대해 알고 있을 것임. 형식적인 것은 업계 자율적으로 가고 감독당국이 끈을 놓지 않고 모니터링을 계속 해 나가는 방식으로 일단 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나라 협회에서 자율로 하라고 해도 금감원에 연락을 해서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 물어볼 테니까 그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적절한 협의와 정보공유가 있다면 실질과 형식을 맞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 금감원과 금융위가 잘 협의해서 사전 컨설팅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66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167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DLF 후속조치에 따른 투자자 보호 강화 관련 내용으로 '21.2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 (위원)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 운용자산에 고난도상품 포함 시 해당 상품의 요약설명서 미교부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밑에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같음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원금 20%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 고난도상품인데 요약설명서에 그런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나 아니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것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20% 최대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판매자 입장에서 입증할 수 있을지, 그것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음.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것이 만약 요약설명서에 담기지 않는다면 소비자 불만이 있을 것 같아 조금 걱정이 됨.
- (보고자) 고난도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비자법 등에 따른 설명의무나 그런 것들을 적용받아서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고 고난도상품에 해당될 경우에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요약설명서를 내도록 하고 있음. 이 요약설명서 내용에는 손실위험이 시나리오별로 얼마나 되느냐,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20% 이상의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것을 안내를 하고 어떤 상황일 경우에 어느 정도 손실될 수 있는지를 별도의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제시하도록 요약설명서를 통해서 고객한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원) 요약설명서에 있는지?
- (보고자) 요약설명서에 시나리오 분석결과 그런 것들을 반영

하도록 해놓았음.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적응을 해야 됨.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되는데 금융기관들과 고객들이 서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음.

- (위원) 고난도상품 규정은 그 내용도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있어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이 규정을 나중에서 해석하는 과정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 물론 다음 안건으로 심사위원회 설치 관련된 것이 있는데 이런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업계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는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봄.
- (보고자) 이 고난도상품 시행을 앞두고 우려를 했던 사항이 2가지 있음. 업계가 과연 얼마나 이 규정의 취지와 세부적인 내용, 그 정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을까 하는 점과 실제 현장에서 시행됐을 때 투자자들이 불만을 호소하지 않을까, 금융기관 직원들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점, 이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꾸준히 업계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령자 등에 대한 시행 자체를 별도 단계적으로 가는 것도 업계의 준비현황, 하다못해 녹취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까지 다 확인을 해봤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창구직원까지도 이 규정의 변경취지라든가 실제 운용방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 상세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업계에 배포하고 시행 전일까지도 계속 업계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위원) 시행일이 언제인지?

- (보고자) 5월10일 시행임.
- (위원) 오늘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 물론 우리는 2019년에 이미 발표했던 것이지만, 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것을 갑자기 내놓고 참고해서 하라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지난 3월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과정에서 나왔던 문제가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시행까지 열흘 남은 상황에서 다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고, 시행을 몇 달 연기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인지?
- (보고자)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8월10일로 연기함. 그리고 나머지 고난도상품 관련된 것은 5월10일에 시행인데 그것은 시행령에 의해서 이미 시행일이 확정된 것이고 사실상 업계가 준비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음.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 날짜부터 직원교육까지 한 달 정도 소요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고난도상품의 공백 상태는 발생할 수 있음.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다른 상품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고 실제 업계에서는 고난도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빨리 준비해야 된다는 유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빨리 따라오라고 하고 5월10일에 시행해도 될 것 같음.
- (위원) 5월10일에 시행한다고 해서 5월10일부터 바로 고난도상품을 파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인지?
- (보고자) 5월10일부터 전면적으로 고난도상품을 팔 수 있는 회사가 많기는 힘들 것 같다는 말씀임

- (위원) 그러니까 공백은 있지만 소비자피해 때문에 창구에서 다툼이 있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인지?
- (보고자) 그 상품과는 관련되는데 제도에 대한 불만은 있을 것 같음.
- (위원) 그러니까 고령자는 8월에 시행하는 것이고 고난도상품은 5월10일 시행이지만 고난도상품을 당장 5월11일부터 파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준비된 다음에 판매하기 때문에 그 문제로 창구에서 소비자와 싸울 일은 없으나, 5월10일부터 준비할 때까지 상품을 판매하지 못할 수는 있다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설명하고 금감원과 잘 협의해서, 지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6개월 유예를 했는데 6개월 유예까지는 아니더라도 설명을 잘 하고 업계와도 소통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알겠음.
- (위원) 다음 안전과 관계되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음. 아까 시나리오 분석 말씀을 하셨는데 시나리오 분석에 대한 어떤 객관성을 담보하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조금 걱정이 됨. 뒤에 나오는 상품 심사위원회 그런 쪽에서 이것을 봐주시는지?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음.

- (보고자) 그러함. 상품의 위험을 하나의 수치로 측정해서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음. 설명 드린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상품이나 아니냐 여부만 판정을 하게 될 것이고, 실제 시나리오분석 같은 경우는 상품구조에 대한 가능성을 체크하는 것임. 평균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업계도 학습이 필요할 것 같음. 한두 번 해보면 점차 경험이 쌓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
-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20%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평균만 갖고 20%얘기를 해야 됨. 이것이 엄청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합의한다는 것도 쉽지 않음.
- (보고자) 실제 운용을 하면 20% 원금손실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구조상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이 20%임. 평균이 아님. 최대 손실가능성이기 때문에 만약 파생결합증권 ELS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기계적으로 나옴. 상품구성을 80%이상은 보장해 준다는 옵션 부분을 20%만 넣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에 따라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음. 그 부분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고난도상품인지 물어볼 수 있게 만들었음. 이것은 고객과 협의과정이 아니고 아마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금융기관에서 이것이 고난도상품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고 고난도상품이면 고난도상품의 딱지를 붙여서 창구에서 판매하게 될 테니까 고객은 다 결정된 다음에 해당 금융상품이 고난도상품인지 아닌지를 접하게 됨. 그래서 고객과의 분쟁 문제는 숙려제도 빼고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68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

○ (위원) 파생상품전문가는 꼭 한 사람 있어야 될 것 같음. 여기 보면 소비자단체 이런 식으로, 물론 금발심 자본분과에 파생상품전문가가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서민분과’, ‘법령 해석심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파생상품에 대한 실무전문가가 꼭 필요하지 않나 싶음.

○ (보고자)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전문성도 법률뿐만 아니고 파생상품의 전문가도 필요하니까, 위원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전문가들이 포함되도록 구성하고 있음.

○ (위원) 저희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위원회에서 적절한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69호 『(주)비엔케이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비엔케이투자증권이 기존 업무 외에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추가로 영위하기 위해 인가단위를 신청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15호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16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 개정
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1년도 금융위원회 제7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30분 폐회)